

# G-Welfare Weekly Report

## 01

### 중앙정부 정책동향

#### 1. 그리스, 디폴트 확정

- 그리스가 6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의 16억유로(약 2조 원)채무를 갚지 못해 서방 선진국 중 처음으로 기술적 디폴트(채무불이행)가 확정됨
- 그리스 디폴트의 실질적 원인은 취약한 제조업 기반 및 관광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부채 의존적 국가재원조달 및 재정역량 관리체계의 부재, 그리고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부정부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임
  - 그리스는 관광산업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자국경제의 자본의 순환구조를 갖추지 못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동력을 상실하였고,
  - 국제투명성기구(2009)에 의하면, 그리스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9억 유로가 뇌물로 오고갔고, 뇌물 및 부정부패로 소멸되는 재원은 그리스 GDP에 해당되는 약 200억 유로(24조)로 분석. 또한 부정부패로 형성되는 지하경제의 규모는 그리스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누수효과가 심각함(세계일보, 2015.7.1.자 기사)
-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과잉복지로 인한 재정적자’가 디폴트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실제 복지 급여 등을 보면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음
  - OECD 사회지출(2014)에 의하면, 그리스의 사회복지지출비중은 GDP 대비 24%로 OECD 평균(21%)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고, 덴마크(30.1%), 핀란드(31%), 프랑스(31.9%), 독일(25.9%) 등 유로존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95.7%로 OECD 평균 대비(59.0%) 40%이상 높으나 고액의 연금이 공무원 등 특정집단에만 집중되어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19%)보다 높은 22%로 불평등 심각
  - 실업급여의 수혜 자격이 있는 사람은 100명 중 12명으로 EU 15개국 평균(40.7%)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55% 수준으로 제한(KEPE, 2012)되어 있음

장기적인 저성장 구조 하에서의 실업률 증가, 취약한 산업구조 및 부채의존적인 국가재정조달 등이 원인

#### 2. 사회적 금융네트워크 출범과 경기도의 대응

- 한국사회투자, SK 행복나눔재단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네트워크(SFN)의 출범(2015. 6.25.)으로 사회적 금융의 연계와 사회적 금융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회구축의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됨
  -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재무적 이익과 “사회적환경적 가치 창출에 목적을 가진” 기업, 단체 등이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임팩트 투자의 준거가 되는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
-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지역자본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형 사회적 금융 체계를 설계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
  - 사회적 가치와 수익에 대한 측정방법 및 지표를 개발하여 道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임팩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공시제도’ 도입, 경기도 I-Bank 및 SIB 활성화를 통한 ‘지역 사회적금융 체계’ 조기 정착. 그리고 Crowd Funding, Social Investment 등 활용 가능한 제도를 검토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

\*사회적금융 네트워크(SFN: Social Finance Network)

임팩트 투자 등을 활용한 지역형 사회적금융체계 설계 필요

### 3.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쟁점

#### 01 현황

-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에 대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대안 마련을 권고하였으나 (2015.6.22), 성남시장(이재명)은 복지후퇴부라고 비난(2015.6.24.)
-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건은 1단계 협의·조정절차를 3회 진행하였고, 현재 2단계 제도 조정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황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 필요(사회보장기본법)
  - 1단계 협의·조정 : 민관합동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논의 후 수용, 변경, 불수용 결정
  - 2단계 제도조정소위원회, 3단계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조정 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조정 진행

#### 02 주요 쟁점

- 각 쟁점에 대한 보건복지부 권고와 성남시 의견

쟁점	보건복지부 권고	성남시 의견
모든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가?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중 개인 여건에 따른 선택권 보장 필요	산후조리원 설치는 주민의 74%가 찬성하는 만큼, 주민의 욕구가 높은 사업
공공 산후조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산후조리원의 공공성 관련 의미 모호, 설치기준, 보건 등에 대한 기준 필요	시비로 운영, 무상서비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우선입소 기준 적용 등 공공성 확보
산후조리비용 인상 효과	산후조리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수요자 증가에 따라 비용인상효과 발생	민간산후조리원 인증·관리감독 방안에 비용통제 방안이 포함됨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침	지역자율성의 침해

#### 03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3개소 설치 검토 중
  - 경기도는 당초 산후조리원이 없고, 수요가 높은 시·군을 대상으로 3개소 설치 예정이었으나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 예정

경기도 차원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검토 중임

	경기도	성남시
설치운영	• 3개(시·군 공모 통해 진행), 최대 14실 • 지역 혹은 위탁 운영	• 3개(구별로 설치), 20실 • 위탁운영
대상	• 지역주민	• 성남시민 ※ 저소득층 우선입소권한 부여
급여	• 현물(산후조리서비스)	• 현물(산후조리서비스) • 현금(민간산후조리원 이용시 50만원)
재정	• 도비, 시비, 본인부담금 • 이용료 : 168만원(저소득층 50%감면)	• 전액 시비 100%

- 검토 방향
  - 제도운영의 역효과(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 비용인상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여 표준적인 매뉴얼, 질병 및 감염관련 안전규칙 등 마련 필요. 특히, 공공서비스로서 공공산후조리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

시범사업을 통한 매뉴얼 제작, 공공산후조리원 기준 마련 필요

##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쟁점과 대응

### 01 주요 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015.4.29. 양승조 의원 외 10인)의 핵심은 사회적기업의 실태조사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과 사회적기업의 관리 기능을 강화
  - 실제 중간지원조직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료제공 관련 권한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통합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임

사회적기업의 실질적 성과 등 운영 실태에 대한 공개 근거 마련

### 02 변화 전망 및 쟁점 사항

-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 운영 관련 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재원 투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기관의 권한 강화와 사회적기업의 자기개선 역량 강화 등의 변화가 기대됨
- 상기와 같은 변화 전망과 함께 몇 가지 쟁점이 예상됨
  - **쟁점 1) 실태조사 항목 및 측정 지표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
    -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영업 및 매출 실적, 고용 및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조사되어 실제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한 현황조사 수준에 그칠 수 있음
  - **쟁점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권한 강화에 따른 광역 및 지방정부의 역할**
    -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자료 요구에 대한 기업의 거부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관리하는 기능이 강화됨.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지방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역할 재설정 필요
  - **쟁점 3)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실태조사, 경영공시, 평가 등 현황 및 성과 측정을 위한 제도들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
    - 실태조사의 구속력 강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영공시 및 평가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 평가대상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담 가중 우려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 및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권한

쟁점 1) 실태조사 및 측정 지표의 적정성

쟁점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한 강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

쟁점3) 실태조사, 경영공시, 평가 등의 제도 통합 운영

### 03 경기도의 대응 방안

-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한 통합적 전략 마련 필요
  - 경기도 차원에서 년 간, 분기당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성과, 현황, 지원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DB 구축을 통해 신규 사회적기업을 발굴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이 적절한 성과평가를 위해 실태조사나 경영공시를 통합한 단일 체계의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와 신설되는 사회적경제 관련조례의 통합하고, 두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을 하나의 체계로 단일화하는 등 통합적 전략을 마련하여 함

# 02

## 사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 1. 「시군 출연 복지재단」 설치 현황

지역복지재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지역재단이 최근 10년간 계속하여 증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 광역 시도 단위 복지재단 6개소, 시군구 단위 복지재단 22개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10개 지역에서는 재단설립을 검토하였거나 설립을 진행하고 있음
- 지역 복지재단의 주요 기능

- 시설수탁운영 : 복지관,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도서관 등 사회복지시설 외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시설까지 수탁운영범위에 포함
- 나눔사업 :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결연사업 등을 추진
- 연구사업 : 지역 내 복지정책 관련 연구
- 간접적 지원사업 :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 내 시설의 운영지원

- 광역단위 재단은 지역복지 관련 정책연구 수행이 주된 기능이며, 기초단위 재단은 시설수탁 운영과 나눔사업이 대표적 역할

〈지역재단의 운영방향 및 주력사업〉

지역재단 분석변수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동작	시흥	양천	신안	목포	평택	광양	서울	부산
시설운영	0	X	0	X	X	0	0	X	X
기부와 나눔	0	0	0	0	0	X	0	X	X
조사연구	X	X	X	X	X	0	X	0	0
지역재단 분석변수	구로	증평	태백	서산	김포	노원	강서	경기	대전
시설운영	0	0	X	0	0	0	0	0	X
기부와 나눔	0	0	0	X	0	0	0	X	X
조사연구	X	X	X	X	X	X	X	0	0
지역재단 분석변수	청주	당진	유성	강남	김해	양산			
시설운영	X	0	X	X	0	X	경북		
기부와 나눔	X	0	0	0	0	0	전남		
조사연구	0	0	X	X	X	X	0		

현재 광역 단위는 6개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2개소를 설치운영

### 2. 주요 복지기관 및 시설 등 동향

기관/행사명	주요내용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2015 전체실무자 워크숍	- 일시 : 2015.7.9.(목)~7.11.(토) 2박3일 - 대상 : 경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협회 사무국 - 장소 : 무창포 비체펠리스(충남 보령시 소재)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Happy Together! Art & Culture"	○ 혜세와 그림들 전(展)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 관람기간 : 2015. 7. 22.(수) ~ 8. 30.(일) - 관람장소 : 용산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서울시 용산구 용산동1가 8) - 모집인원 및 대상 :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이용자 500명 ○ 앤디워홀 LIVE - 관람기간 : 2015. 7. 22.(수) ~ 9. 27.(일) - 관람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B2(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 모집인원 및 대상 :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이용자 300명 ※ 각 전시 당 신청기관별 최대 30명 ○ 신청방법 : 신청사이트( <a href="http://culture.ggcsw.or.kr/">http://culture.ggcsw.or.kr/</a> )를 통한 관람신청

# 03

## FACT CHECK

###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요금 지자체별 30배 차이?

- “경기도내 지자체의 장애인콜택시의 요금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 지역별로 제각각”, 경인일보 2015.6.22.)
- 경기도는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지리적 특성상 광역적 이동이 빈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 도입(11%) 저조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부족으로 인해 교통약자 이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기도가 지난해 7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표준조례’ 를 제정하고 이를 권고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시군별로 요금, 운행시간, 운행구간 등이 상이함
  - 추가요금의 경우, 성남·용인은 1km당 20원, 오산은 1km당 600원으로 30배 차이
-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차량구입비의 일부를 국비에서 보조해줄 뿐, 인건비,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 비용 대부분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비용 등의 차이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결과임

〈지자체별 장애인콜택시 보유 현황(2014.12월 기준)〉

도입률	지역수	상세지역
100% 초과	13곳	고양, 군포,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연천, 오산, 용인, 의정부, 이천, 포천, 화성
50% 이상	10곳	광주, 김포,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양평, 파주, 평택, 하남
50% 미만	2곳	광명, 의왕
0%	6곳	가평, 과천, 구리, 남양주, 안성, 여주

자료 : 2015 경기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주: 도입률은 보유대수를 법정대수로 나눈 수치임

# 04

## 통계로 보는 복지

### 한국인의 여가생활

OECD 주요국의 여가시간



여가시간 변화 추이



여가활동별 순위(복수응답)



자료 : OECD, 2009 생활시간 사용조사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시간은 3.83시간으로 OECD 평균(4.38)대비 1시간가량 적고, 이는 조사대상국인 20개국 중 3번째로 낮은 수치임
-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여가시간은 평균적으로 평일 3.6시간, 휴일 5.8시간이며, 여가시간 활용은 주로 TV시청과 인터넷/SNS, 산책, 게임 순으로 소극적 휴식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민들이 여가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정책은 여가시설 확충(63.6%),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61.4%), 여가전문인력 양성·배치(44.8%), 소외계층 여가활동 지원(41.8%) 순으로 조사되었음

‘국민여가활동조사’는 2년 주기로 시행되며, 2014년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만5세 이상 10,000명을 대상으로 1:1 방문 면접을 통해 실시